

# “광주·대구 군공항 특별법 2월 통과” 한목소리

### 민주 송갑석 의원·국힘 주호영 대표 등 힘 모으기로 “국비 지원·이전사업 예타 면제 등 정부도 공감대”

광주시와 대구시가 각각 추진해 온 군(軍) 공항 관련 두 가지 특별법의 국회 동시 통과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광주 군공항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현재 국회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각각 발의된 상태이며, 이른바 다를 뿐 내용상 100%에 가까워 ‘쌍둥이 법안’으로 통한다. 사업 총괄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보다 다른 사업 방식과 재정지원 등 대부분 내용은 상당수 일치해 “실질상 같은 법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기부 대 양어 방식만으로는 원활한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재정 투입 근거를 만들고 국가 차원의 사업

으로 격상시켜 진행하는 것이 두 특별법의 핵심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조율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안보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군공항이 적절히 조정되고 통폐합돼야 한다고 본다”며 “소음 피해보상으로 매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면 이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주도성’을 발휘해 특별법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 대 양어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공항이전에 대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 정부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 역시 “이른 시간 안에 (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2월)에 통과되면 제일 좋겠지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법은 동일하게 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송 의원과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부 김상훈 의원, 국토의 소속 강대식 의원, 국방위 소속 이병헌 의원이 참석했다. 또 강 시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도기 기자

### “물 부족 심각…묘책 찾자” 정치권 맞손 저수율 바닥…동북댐 26%, 주암댐 27%

물 부족 등 최악의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전남 정치권이 머리를 맞댔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과 이병헌(동남) 광주시장위원장을, 신정훈(나주 화순) 전남도당위원장을,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 진명호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 국가물관리위원장인 광주과기원 김준하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 부족·가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뭄과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호남이 도시성장 과 팽창을 거듭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업용수 위주의 물관리 체계가 유지되는 것은 요즘 실정과 전혀 맞지 않다”며 “물공급 안정화 실패 진단과 공급체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최악의 물 부족과 가뭄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광주 시민 143만명 중 86만명(60%)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는 식수 전용댐인 화순 동북댐 저수율이 26%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주암댐도 지난 25일 기준 27%에 불과해 사실상 광주·전남 주요 저수율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 또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전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71.1% 인 것에 비해 전남은 52.4%에 불과하다.  
섬 식수난도 심각하다. 본격적인 영농기(4월 이후) 물 부족 우려에 대비해 용수비축을 위한 사전대비가 중요한 상황이다. 각종 특화단지 구축과 도시개발을 위해서도 산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물공급 여력 문제가 중요한 포인트로 대두되고 있

다.  
이병헌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광주·전남과 정부의 물관리 역량을 총동원해 물부족 현상의 실태를 살살이 살피고 근본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은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덕효 위원장은 “물 부족 문제는 겨울이 아닌 여름 강수량에 의해 결정된다”며 “광주·전남 기존 물공급 시설이 적절하지 재평가해 여유량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하 교수는 “해수담수화 기술과 해상풍력 에너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워터그리드 등 우리가 가진 첨단기술을 적극 사용해 현재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실증단계를 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 광주전남연구원장 공모 중지 대행체제 전환…분리수순 가능성

재(재) 광주전남연구원이 제5대 원장 공모 절차를 중지한 가운데 분리 수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시와 전남도 공동 출연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해 시·도의 회 발로 분리론이 대두된 이후 광주시는 운영 방식에 대한 조직 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며, 전남도 또한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도시 행정을 주로 하는 광주시와 농어촌 행정 중심인 전남도의 행정적, 환경적 차이로 인해 개별 특성에 맞는 공동 연구 수행이 쉽지 않다는 시·도의회의 문제 제기 이후 분리론이 확산했다.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관련 현안 간담회’ 강기정 시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관련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국회, 정부와 함께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신속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 제공

29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당초 연구원은 지난 6일 제5대 원장을 공모한 결과 단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재공고 절차를 밟기로 했었다.  
하지만 연구원은 지난 26일 개최한 제39차 임시이사회에서 제5대 원장 공개모집 절차 중지를 의결했다.  
이유는 ‘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 때문으로 확인됐다.  
광전연은 내부 규정에 따라 당분간 조장환 연구본부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 ‘민생안정·경제위기 극복’ 광주시·시의회 맞손

#### 예산편성 협의 정례화…현안 해결 국비확보 협력

광주시와 시의회가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 정무창 시의회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운영위원회 의원, 안도걸 시 재정경제자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광주전남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원활한 예산 편성·심의 위한 대원칙 마련 ▲2023년 제1회 추경 편성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재무관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 공동 노력 등 안건을 논

의했다. 우선 예산 편성·심의 단계에서 시와 시의회 간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극복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 시와 시의회는 3월 조기 추경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SI(인공지능) 직접단지 조성 2단계 사업, 무등산 방풍포대 이전사업 등 국비 확보를 통해 기회도시 광주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지역 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뿐만 아니라 문화·인간·환경·인문 분야 등으로 국비 발굴 분야를 다양화 하는데 함께 힘쓰기로

### 시행 한 달 고향사랑기부제 과제는… “홍보 확대·신뢰 확보”

#### 유명인사 줄줄이 기부 ‘관심’…모금실적은 수천만원대 ‘과열 방지’ 정부 지침·홍보 제약 지나쳐…“알려야 성공”

개인의 기부로 열악한 지자체 재정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한 달을 맞는다.  
광주·전남에서도 출향(出鄕) 명사 또는 지역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혼돈한 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다각적인 홍보와 기부금 활용 계획 마련 등은 제도 안착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28일 광주·전남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시행으로 고향사랑기부제(기부제)가 본격 시행됐다.

국내 거주 개인이 주소 등록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광주·전남 각 지자체도 기부제 시행에 맞춰 ‘붙임’에 열을 올렸다. 앞다퉈 지역 맞춤형 답례품 내역과 1·2호 기부자 소식, 단체장 상 호 등들을 홍보했다.  
실제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김황식 전 국무총리, 도올 김용옥 선생, 가수 남진·강진 등이 기부에 동참해 관심을 환기했다. ‘나주 목사내아 숙박체험권’, ‘전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 등 지역 특화 이색 답례품도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지자체 별 모금 실적은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따라 자세한 내역은 공식 공개되지 않았지만 광주시·전남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 단위 모금 실적은 수천만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이 될 것이다”는 기대엔 못 미치는 셈이다. 지자체 단위로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등 기부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정부 지침으로 홍보에 제약이 많고 불명 소리를 한다.  
법령에 따라 기부제는 광고 매체에 의한 홍보만 가능하다. 전화·서신·방문 등 개별 모금 활동은 할 수 없

다. 현실적으로 주요 모금 대상인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 단체에 기부 권유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지침을 어기면 수개월 간 모금 활동이 금지된다. 기부 강요와 과열 경향을 막기 위한 규제라지만 기부제 성공을 염원하는 지자체 입장엔 속이 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실제 기부 결심까지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홍보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제도 자체가 인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도 “정부가 직접 나서 제도 자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각 지자체 별 기부 유치 홍보도 일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홍보로 기부금이 유의미한 규모로 모여야 재정 불균형 해소,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5·18’ ‘제주 4·3’…역사 교과서에 반영한다 편찬상의 유의점 ‘부록’ 제시… ‘학습요소 반영’

개정 교육과정에 표현이 빠졌던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등의 표현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린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 수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편찬준거)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편찬준거는 검정교과서를 쓸 때 지켜야 하는 지침인 ‘검정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을 담은 문서다. 출판사 등 민간에서 쓴 교과서 내용이 다르다면 혼란이 생기므로 이를 막기 위한 집필상의 지침이다.  
이날 공개된 편찬준거를 보면, 당국은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역사(한국사1·2)에 한정해 편찬상의 유

의점에 ‘부록’ 형태로 성취기준별 학습 요소를 실었다.  
아울러 같은 지침 내 ‘내용의 선정 및 조직’ 항목에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편찬상의 유의점 부록의 학습 요소를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역사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 ‘4·19 혁명’, ‘6월 민주 항쟁’과 함께 ‘5·18 민주화 운동’ 등 120개 학습요소(단어)를 실었다.  
고등학교 한국사1·2의 경우 ‘일분군 위안부’,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119개 학습요소를 반영했다.  
2018년 개정된 현행 교육과정의 129개 학습요소와 비교해 10개 적은 것이다.

### 지방소멸 대응 ‘과격·지속성’이 관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역의 인구 불균형 해소 노력이 병행돼야 하고 과격적인 지원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 혁신정책 기획단과 전남도의회는 27일 오후 도의회 초의실에서 인구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시행과 전남

형 인구정책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경철 한국도시경영관리연구원 전략센터장은 “국가적 차원의 인구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소멸 이슈가 복합화돼 있다”며 “적정 출산율과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의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매민평** 이태헌

**자충수**

태헌